

빠듯한 공사기간에 철야작업 해도 모자랄 판에... 평창올림픽 어저나

개·폐회식장 착공 또 지연

시공사 기본설계 보완작업 착수
한달 늦춰져 내달 중순 착공
2017년 9월 적기 완공에 비상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개·폐회식장 착공이 지연되며 2017년 9월 완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가뜰이나 빠듯한 공사기간으로 철야작업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본설계 보완작업에 착수하며 한 달여 일정이 더 늦춰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평창올림픽조직위와 도에 따르면 설계와 시공을 맡은 대림산업은 지난달

말 완성한 기본설계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순 이전에는 토목공사 작업에 들어가야 했지만 보완에 따라 다음 달 중순이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완작업에는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될 개·폐회식 세리머니 행사를 감안해 식장 일부를 공연에 맞는 형태로 고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행사가 열리는 2월 평창의 혹한에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앞서 지난 7월 개·폐회식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두 차례 입찰 무산에 따

라 조직위는 2017년 9월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결정했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와 시공 병행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사업 지연으로 절대공기를 맞출 수 없게 되자 3년이 소요되는 공기를 24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비상체제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달 가까이 더 지체되며 절대공기를 맞출 수 없게 됐다. 영구건축물 대신 조립식 형태 등으로 공기를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기상악화 등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해법을 못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폐회식 공연 준비와 시설물 설치를 감안하면 2017년 9월에는 무조건 완공돼야 한다”며 “적기 완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충과 올림픽 레거시 부문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

알립니다

주택·건설·건축의 최신 트렌드 구경 오세요

'강원에코(ECO)홈페어 2015' 11월25~28일 춘천 호반체육관



청정 강원도의 주택과 건설, 건축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강원에코(ECO)홈페어 2015가 11월25일부터 11월28일까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강원지역 최초·최고의 주택·건설·건축 종합전시회로서 △가구 및 실내 인테리어 △친환경 태양열·태양광 시설 △가정용 소품 △건축자재 △전원주택 및 주택정보 △건설장비 및 공구 등 각 분야의 업체들이 특색 있는 각각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도내에서 생산되는 가구, 조명, 실내 인테리어시설, 건설·건축 자재 등을 대거 선보여 주민들에게는 내 집을 꾸미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업체들에게는 지역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각 시·군의 홍보 부스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건설, 건축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강원에코홈페어 2015에 관련 업계의 많은 참여와 주민들의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11월25~28일(수~토)
- ◇장소 : 춘천시 석사동 호반체육관 및 특설행사장
- ◇참가신청 : 강원ECO홈페어2015 사무국(070-7098-8381)
- ◇홈페이지 : <http://ecohomefair.kr/>
- ◇관람객 입장료 : 무료

■주최 :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강원일보사 ■후원 : 강원도·춘천시

강원도민일보 안형순 회장 별세

안형순 강원도민일보 회장이 지난 10일 오후 4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37년 원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춘천고와 강원대 수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과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수료했고, 1959년 강원일보에 입사하며 언론계에 입문했다. 강원일보 편집국장, 논설주간, 상무이사 등을 거쳐 1992년 장기간 강원도민일보의 사장과 회장으로



활동했다. 또 신문윤리위원, 한국신문협회 지방신문발전위원장, 전국지방신문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설악문화상, 서울언론인클럽 언론인 한길상, 일경언론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유족은 부인 노경하씨와 아들 용주(강원발전연구원 인사총무팀장)씨, 딸 진희(신한은행 강원영업본부 차장), 선희(도교육청)씨 등 1남2녀다. △발인=13일 오전 9시 △장지=경춘공원묘원 △빈소=춘천 효장례식장 201호 △연락처=(033)260-9100

/ 올림픽 개·폐회식장 착공 지연 배경은 /

일관성 없는 행정에 번번이 발목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건립사업이 각종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 대폭 삭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했던 개·폐회식장 강릉 이전 논란 등으로 거의 1년여를 시작도 못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조직위는 개·폐회식장의 콘텐츠보다 이달 초 착공, 2017년 9월 완공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천신만고 끝에 지난달 기본설계를 마쳤으나 최근 정부가 개·폐회식 공연에 적합한 디자인과 돔 설계 검토 등을 거론하면서 또다시 공정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도는 올림픽플라자 총 사업비로 1,397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36%를 삭감한 1,226억원만 승인했다. 이 중 개·폐회식장 예산은 940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사업자 선정을 위해 두 차례 입찰을 실시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예산 확정 등 사업 지연에다 입찰 무산으로 적기 완공에 비상이 걸린 조직위는 결국 대립사업을 설득해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결국 지난달 말 기본설계가 나왔지만 이번

정부 예산 삭감·강릉 이전 논란
1년여 시간 시작도 못하고 허비
최근 돔 구장 등 설계 검토 거론
이미 끝난 사안 뒤늦게 문제 제기

에는 정부가 발목을 잡고 나섰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을 행사 용도에 맞게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종합국감감사에서 "개·폐회식장 건설이 적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개·폐회식 공연 내용과 상관없이 지어지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있다"며 "돔 구장 설계를 포함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폐회식 용도에 맞는 설계와 혹은 대비한 돔구장 설계 문제는 이미 거론됐다가 마무리된 사안이다. 조직위는 말도 안 되게 적은 사업 예산과 적기 완공을 고려해 이미 돔구장 설계를 포기한 상태다. 대신 실시설계 과

정에서 관중석 은풍기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개·폐회식 공연 내용도 기본설계 과정에서는 가만있다가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또한 개·폐회식장이 대회 후 1만2,000석 규모의 잔디 관람석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되는 것과 관련, 유산 차원에서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조직위에)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뒤늦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도와 조직위 간 레거시 논쟁이 재점화돼 착공이 지연될 경우 최대 과제인 개·폐회식장의 적기 완공은 아예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성현기자



社 說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착공, 연내 꼭 결말내야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의 통 큰 협력으로 도의 내년도 국비 목표액 6조2,000억 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성과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도 정치권은 사측생 각으로 2016년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국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지역의 정치력이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다.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곧 각 상임위원회 내년도 정부안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도 국비 목표액 달성과 현안사업 예산 확보의 '열쇠'를 쥔 연말 예산국회로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도는 현재 예비타

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춘

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와 원주~여주 전철도 기

본설계비 명목으로 각각

44억 원, 15억 원을 요청

한 상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비교 내년도에도 철도기본설계용역비로 120억 원이 수시

비정예산으로 정부안에 담겨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만 긍정적으로 도출되면 사업 착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통과 예정인 4개 시·군의

주민 1,000여 명이 집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두

캠페인을 벌이면서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고, 지역의 도의

원·시의원들이 정부비중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 정부를 향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

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제1공약인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

년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처음 제

시한 이래 30년째 지금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30년 전 노태우 정부 때 같이 검토되었던 경부고속철

도는 1989년 추진방향을 결정한 후 2004년 제1단계 개통을 거쳐 2010년 전 구간이 완공되었고, 호남고속철도는 2006년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2009년에 착공해 2014년 고속선용선이 개통되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B/C(경제적 분석)가 0.3점대(동서고속화철도는 0.89점)였지만 AHP(정책적 분석)에 의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됐다.

하지만 30년을 기다려 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고, 심지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부 부정적인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는 이

야기가 나뉘고 있는 상황

이다. 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자간의 사정을 확

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또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수혜지는 세대를

뛰어넘는 전체 한민족이다. 국회는 균형 감각을 갖고 이 사업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즉,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국가 불류망에 혁신을 가져올 역사적이며 국가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사업의 추진이 확정되면, 정부의 유관시 아니셔티브 구상의 기본인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한반도중단철도와 국내 철도망 연결도 진일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처럼, 국가의 격(格)과 가치를 드높이는 중차대한 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착공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가 강원도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서라도 동서고속화철도의 착공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 시발은 국회의 예산 배정이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철도기본설계비 120억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긍정' 나오면 곧 사업 착수
30년 선거 단골 공약, 조기 착공 미룰 수 없어

동서고속철 예타통과 총력전

16일 세종청사서 2차 점검회의

도, 열차 편량 줄이고
대안노선 등 반영 계획
B/C값 상향 도출 사활

강원도가 이번 주로 예정된 동서고속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재로 국토부, 강원도 등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2차 점검회의가 개최된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비용 분석과 함께 수요 분석 결과도 제시돼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의 운명을 가를 초기 B/C값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B/C값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 이상이거나 이에 근접한 결과가 나올 경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2월 실시한 '춘천~속초 철도대안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역'에서 B/C값이 0.97이 도출된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3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처럼 B/C값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 사업은 요원해진다.

지난 2001년 처음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0.49의 B/C값이 도출된데 이어 2010년 두번째 조사에서 0.73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B/C값 (기획재정부 조사)



로 조금 상승했으나 2012년 세번째 조사에서는 0.67로 떨어져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는 이번 2차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정도의 B/C값이 도출되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

에 열차운영계획을 애초 1편 8량에서 1편 6량으로 줄이고, 철도노선도 비용이 적게드는 국토부의 대안노선을 반영하는 등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비용분석에 반영을 요구했다.

동해안 일대의 새로운 개발수요에 대한 반영도 요청했다. 도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금강산 관광재개 등으로 인한 신규 수요를 수요분석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비용절감 방안과 신규수요가 반영되면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이전에 얻은 B/C값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차례 도전 끝에 어렵게 사업 승인을 얻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예산 확보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사업확정이 늦어져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도는 정부에 102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안형순 강원도민일보 회장 별세

56년간 언론창달 헌신

강원도를 대표하는 언론인으로서 외길을 걸어온 안형순 강원도민일보 회장이 지난 10일 오후 4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37년 5월 10일 원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춘천고와 강원대 수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과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1959년 강원일보 기자로 입사해 편집국장·상무이사·논설주간을 역임했으며, 1992년에는 강원도민일보를 창간, 초대 사장과 회장을 맡아 56년을 한결같이 신문 편집·경영의 일선에서 언론 창달에 헌신해 왔다.

고 안 회장은 강원도민일보의 사시를 '도민을 생각하는 신문, 도민이 사랑하는 신문'으로 정하고, 조간신문·가로쓰기·지역밀착 편집·사원 자율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전국 10대 지역일간지로 성장을 이끌며 지역언론사에 우뚝한 금자탑을 세웠다.

월드컵축구 강릉 유치에 위한 예금갯기운동, 금강대기 전국중고축구대회 창설, 강원중소기업대상·강원자치봉사대상·김유정신인문학상 제정, 동계아시아게임 유치 캠페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 개최 등 문화·학술·스포츠 행사를 통해 지역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인은 향토발전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강원개발연구원 이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강원본부 이사장, 의암류인석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맡아 열정을 쏟았다.

특히 지역인문육성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26개 지역종합 일간지가 참여한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의 설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초대 회장을 맡아 지역발전 위한 전략과 기획의 구심체



故 안형순 회장

로서 지역언론 육성에 앞장섰다.

이를 기반으로 언론 분야의 분권운동 시발점인 '지역신문 발전지원법' 제정을 제안,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매진했다.

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한국신문협회 이사, 한국신문협회 지방신문발전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을 역임하며 한국 언론발전에 기여했다.

고인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설악문화상(언론부문), 제15회 서울언론클럽 언론인 한글상, 제3회 일경인문상 대상을 수상했다.

고인의 빈소는 춘천 강원효장례문화원(2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3일 오전 9시, 영결식은 오전 10시 강원도민일보에서 회사장으로 거행된다. 장지는 경춘공원묘원.

유족으로는 미망인 노창하 여사와 장남 홍주(강원발전연구원 인사총무팀장)씨, 딸 진희(신한은행 강원영업본부 금융센터차장)·선희(도교육청)씨와 며느리 유미선(강원발전연구원 연구지원팀장)씨, 사위 홍도현(신한은행 안양지점장)·김범조(쌍용정보통신 부장)씨가 있다.

연락처는 033)260-9100(강원도민일보 총무국), 260-9009(비서실).
▶관련기사 4면
최원명 wonmc@kado.net

- ▶빈 소 : 강원효장례문화원(201호)
- ▶영결식 : 13일(화) 오전 10시 강원도민일보 회사장
- ▶장 지 : 경춘공원묘원

건설사 신용등급 우려가 현실로...

한기평, SK 등 3개사 하향조정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중·대형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해외사업장 부실과 공공건설 시장의 낮은 이익률이 건설사들 실적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6개 건설사에 대한 회사채 등의 정기평가를 실시, 3개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2개 건설사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회사채 신용등급이 A였던 SK건설은 A-로 한 단계 내려갔다. ㈜태영건설과 두산건설(주도 A에서 A-로, BBB에서 BBB-로 떨어졌다.

(주)한화건설은 등급전망이 A- 안정적에서 A- 부정적으로, 한신공영(주)은 BBB 안정적에서 BBB 부정적으로 조정됐다.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평가된 곳은 향후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에 6~7개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바 있는 신용평가 업계가 하반기에 다시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대거 떨어뜨린 이유는 해외건설의 부실 여파와 공공 부문의 수익성 저하로 건설업계의 재무구조 개선이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SK건설은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와시(Wasit) 프로젝트 현장이 완공 전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있고, 지난해 해외플랜트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본 한화건설은 올해 상반기에도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손실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태영건설은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건설 사업의 정상화와 주택실적이 앞으로 건설사 신용등급 개선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 사업장들의 준공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한신공영과 한라 등 중견사들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축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올해 전체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기업 법인세 납부액, 6년 새 '절반 급감'

건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지난해 건설기업이 낸 법인세가 6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홍수는 11일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 세제 주요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설연이 이 보고서를 통해 국제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기준으로 건설업종에 부과된 법인세액은 2조17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4조2000억원의 54.1%다.

경영악화로 지난해 2조1734억 전체 업종 중 부담액 5번째

"시장 정상화가 세수증대 도움"

이로써 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 세액에서 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10.8%에서 2014년에는 6.1%로 감소했다.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총액은 35조4440 억원이었다.

이처럼 건설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경영실적 악화 때문이다. 실제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건설기업 가운데 손실법인은 전체의 24.9%인 총 2만1035개사에 달했다.

또한 건설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될 여지도 없어 건설기업의 법인세 감소와 이에 따른 정부의 세수 감소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건설 및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 도입된 각종 건설 및 주택

관련 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선에 따른 세수 감소보다는 건설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건설시장 정상화의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최근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은 여전히 전체 업종 가운데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이 추진되면 해당 기업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는 물론 협력업체의 수의 증대로 세수가 늘어나고, 각종 부담금 및 부담금 등 준조세 발생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건설연은 설명했다.

김정석기자 jskim@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건설기업 법인세 납부액, 6년 새 '절반 급감'

김영덕 건설연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건설 및 주택 산업에서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을 검토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큰 세수 증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년 건설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완화 실적은 한 건밖에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1개 건설사업에 19개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준조세 부담이 크다고 건설연은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건설 및 주택세제 10대 개선과제를 내놨다.

먼저 법인세에서는 △PF 대출 대위변제 손비 인정 △기업환류세제 공제 확대 적용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 불산입 규정 완화 △정비사업조합 채권 손금 산입 법률 명확화 및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지방세 개선 검토과제로는 △기부채납 목적 취득 자산의 세금 감면 △건축물의 범위 기준 완화 △주택사업공여지 분리과세 적용기준 추가 정립을 제안했다. 김정석기자